

야3당, “민주·한국당, 결단해야”

(미래-평화-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단체행동 이어가 청와대 앞 열기로 한 공동 기자회견은 전격 취소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 야3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고, 여당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느냐.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했다. 이제는 정치체도를 제대로 민주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7일 한국당과 연계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민일 두 당만이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재앙이다. 적폐연대 성사”며 “밀실에서 몇 초 퍼주고 주고받기 한 예산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 적폐 연대는 불락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정치구 연계’를 처음 봤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했던) 1990년 정기국회 예산투쟁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대표”라며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누가 먼저 바꾸자고 했느냐”며 “이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이 정부의 모태가 됐던 이전 대통령이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 국민에게 편한 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을 달리 먹지 말고 관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3일 이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끝판왕이 지나게 된다. (청와대

가) 오늘이라도 5당 대표들 다 모아 주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3당은 오후에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듯한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애초에 민의를 대변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두당이 쪼개기를 했다”며 “그결과, 소수정당 득표율이 20%에 달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90% 이상을 가져갔다. 자기를 이해를 맞추는 데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민의”라며 “두 거대 야당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지 못한다고 해도 거부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야3당은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전격 취소됐다. 한병도 청와대 정부수석의 국회를 찾아 야3당이 전달하려던 서한문을 직접 받겠다는 뜻을 전하면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촉구를 위한 야3당 대표 농성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정부수석이 국회에 직접 와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며 “이를 존중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농성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시스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조속 통과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민주 홍영표·한국 김성태 원내대표 찾아 협조 당부...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정기일 내 통과되지 않은 예산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통과를 당부 드리기 위해 찾

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원내대표들 간 몇 차례 회동을 했고 서로 협의하는 중”이라며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고 좀 더 의견을 나눌 부분도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해서 내년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후임자가) 취임하는

대로 예산을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 예산 통과를 위한 협의, 협상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그는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를 찾은 데 대해 “지금 저한테는 예산 통과가 최우선 과제고 다른 일정들보다 우선해서 취소하고 신경 쓸 것”이라며 “차관을 비롯해 거의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지만 이견이 있다고 듣고 진행을 빨리 협상하기 위해 최우선했다”고 말했다.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민주당, 2기 혁신성장추진위 출범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2기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5일 출범했다.

17기에 이어 2기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혁신에 좀 더 박차를 가하지는 당의 뜻으로 또 다시 맡았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2기는 앞으로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속도에 맞춰서 제도의 대전환하겠다”면서 “정체돼있는 혁신 성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

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존 혁신에 새로운 혁신을 더 한다는 목표로 기술진보가 산업에 대한 지원,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월 구성된 2기 혁신성장위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박정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

신성장산업 분야, 에너지산업 분야, 휴먼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됐다. /뉴시스

당정, 軍보호구역 해제 완화

전국단위로는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

전주 헬기부대 이전 기존 부지 비행안전구역 해제

당정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화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일부 지역은 군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임의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지역별 보호구역 해제는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도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확인,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

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정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 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5km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극한 대치하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문점 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